

www.peaceone.org

평화누리 통일누리

2018년 7-8월 Vol.177



현안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이제는 문민국방장관을 임명할 때

7.28 평화홀씨마당

현장 / 회원마당 / 지역소식



- 1 [사진에세이] 73주년 8.15를 맞이하며 + 김성한



- 2 [7.28 평화홀씨마당]

- 정전 65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시대의 주인으로 나서자! + 문규현
- 새로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주동적으로 맞이합시다! + 김수영, 김용호
- 7.28 평화홀씨마당 이모저모 “총을 내려라!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 정수미, 서종환, 강윤미, 이상진, 이도흙, 강문수



- 11 [현장] 청년, 제주평화기행 + 이기은



- 13 [자료]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 20 [회원마당] 이제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다 + 이기훈



- 25 [소식] 광주/나주/대구/마창진/보령/부산/서울/성남용인/인천/전주

- 32 [회비와 후원금] 감사합니다.



73주년 8.15를 맞이하며

김성한 노동모임

아리랑~~아리랑~~아라리요~~

격동기 민초들의 고초, 민족의 암울한 현실, 친일의 만행, 일제의 수탈과 만행, 조국과 민족을 위해 자신과 가족을 희생한 애국지사들의 삶이 고스란히 스며들어 있는 조정래 작가의 아리랑.

8.15 가 되면 생각하게 되는 질문 하나.
8.15를 73번째 맞이하고 있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독립한 것인가?

1910년부터 36년이지만
실질적 일제의 침탈로 보면 구한말부터 50년이란
시간을 자주적이지 못했던 시간들이었다.
지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일본의 역사적 사과,
위안부문제, 강제징용과 징병의 문제들을 태동시킨
현대사의 암흑기였다.

청에서 일본으로, 일본에서 미국으로.
심장부에 외국군대를 주둔시켜야 하는 독립국가?

민족의 혼과 애환이 가득한 아리랑을 불러보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그리고 이제 뜨거운 가슴과 냉정한 이성으로
민족의 화합과 통일을 이루고
더 이상 민족의 아픔이 없는
평화와 통일을 이루어 나가자.

평화와 통일이 꿈이 아닌 현실로
평화와 통일을 만들어나가는 사람들이 되자.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요~~~
더이상 아리랑이 통곡의 노래가 되어선 않된다.

전북 김제의 조정래 작가 아리랑 문학관 앞에서
민족이 나아갈 미래를 그려본다.

***아리랑 문학관은 소설의 주인공인
김제 죽산면 내촌 외리 사람들의 고향에 건립되었다.

정전 65년,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 시대의 주인으로 나서자!

문규현 신부·상임대표

분단선을 자유로이 넘나드는 남북 정상을 보면서 30년 전 비장한 각오로 임수경의 손을 잡고 분단선을 넘던 생생한 기억이 떠올라 남다른 감격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그로부터 30년 뒤 판문점에서 만난 양 정상은 “한반도에 더 이상 전쟁은 없을 것이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었음을 8천만 우리 겨레와 전세계에 엄숙히 천명”하였다. 70여년에 걸친 통한의 분단과 정전체제에 짓눌려 찢기고 갈라져온 이 겨레에게 이제 평화가 오는가.

당시 신앙인의 간절한 기도로 외쳤던 한반도 평화협정이 이제 당국 간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 이 과제는 한반도 비핵화, 북-미 수교와 함께 이뤄질 때 한반도의 공고하고 항구적인 평화로 정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뒤 처음으로 열린 북-미 고위급회담 결과는 우리의 우려를 자아낸다.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대북 체제안전 보장이라는 새로운 길을 가는 마당에 난관이야 없으랴만…. 양국은 “상호 간 신뢰구축이 한반도 비핵화를 추동할 것”이라는 싱가포르 공동성명 합의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 실현 원칙으로 제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그 첫 조치는 단연코 남북 정상이 합의한 올해 안 종전선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로도 70여년에 걸친 북-미 양국의 적대관계를 해소하는 데에서 한반도 비핵화의 수준과 속도 및 방안, 대북 체제안전 보장의 방도, 이 두 사안의 배열 등을 둘러싸고 치열한 줄다리기가 벌어질 것이다. 이 모든 과정에서 분단과 정전체제를 기반으로 기득권을 누려온 대북 강경세력들의 끈질긴 방해가 예상된다. 이들은 북의 비핵화 의지에 의구심을 제기하며 양국 사이의 불신을 조장할 것이다. 이런저런 요인으로 인해 협상이 지연될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으며, 제한적인 합의만 이뤄질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70여년 만에 열린 평화의 기회가 다시 유실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반도 역사의 대전환을 당국자들에게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온전히 우리 힘으로 이루지 못한 해방이 분단과 전쟁으로 이어져 온 겨레에게 씻을 수 없는 고통과 상처를 안긴 뼈아픈 과거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무너진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엄동설한을 뚫고 광

장과 거리로 나섰던 민주의 촛불은 자주평화의 촛불로 발전되어야 한다. 민주주의가 그렇듯이 '평화의 새 시대'도 결코 거저 주어지지 않는다. '평화의 새 시대'는 냉전대결세력이 약화되고 평화통일세력이 정세의 주도권을 질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것이 촛불이, 노동자, 민중이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하는 근본적 이유다.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기 위한 촛불이, 정리하고 갈날에 맞선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가, 참교육의 외침이, 대대손손 내려온 고향 땅을 군사기지로 내줄 수 없다는 강정과 소성리 할매의 절박한 외침이 더 이상 '빨갱이'로 매도당하지 않는 시대, 민주주의와 인권, 노동과 평화 번영, 평등이 온전히 실현되는 시대가 바로 평화의 새 시대가 아니겠는가.

우리와 후손들이 평화가 강같이 흐르는 한반도에서 하나 되어 무엇에도 얽매이지 않고 자유롭게 창의적인 삶을 사는 아름답고 위대한 꿈을 꾸어보자. 정전협정 체결 65주년인 올해 7월 27일에 남-북-미(중)의 종전선언을 촉구하며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해 힘쓰기를 다짐하는 계기로 삼자. 

새로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를 주동적으로 맞이합시다!

— 7.28 평화홀씨마당 주제발언 _ 발표 : 김수영, 김용호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으로 마침내 한반도에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열리고 있습니다. 70년 넘게 민족과 민중의 삶을 짓밟아 오던 외세와 이에 빌붙어 온 기득권 세력들을 해체하고 노동자·민중이 역사의 전면에 나서 이 땅의 자주와 통일, 번영을 이끌어 갈 평화의 시대가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가시밭길, 아니 지뢰밭이 되리라는 것은 여긴 모인 우리 모두의 한결같은 우려입니다.

기무사 계엄 문건은 대결과 분단 세력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언제라도 난도질해 버릴 수 있음을 똑똑히 보여준 상징적 사건입니다.

이들 뒤에서 남북·북미정상회담 및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회의, 불신하며 그 파탄을 바라는 미국과 국내의 수구세력과 언론들이 파리를 틀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의 우려를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저 우려하는 것만으로 우리의 앞길에 해답과 길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대결과 분단, 전쟁으로 인한 온갖 고통을 가장 밑바닥으로부터 온몸으로 감내해 온 노동자·민중이 이제 새로운 평화와 통일, 번영의 시대의 혜택을 맘껏 누리게 되는데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가야 하는 길도 역사적 해답도 있다고 할 것입니다. 바로 이런 까닭에 노동자·민중이 새로운 평화의 시대를 여는 주역으로 나서는 것은 시대적 당위이며, 시대적, 역사적 책무를 다하게 되는데 비례해 그 혜택도 누리게 되리라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이를 위한 첫째 과제는 무엇보다도 노동자·민중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 이행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될 국내외 기득권 세력을 무력화하여 정세의 전략적 주도권을 쥐는데 있습니다.

분단과 대결에 기생하여 권력과 돈을 틀어쥐고 노동자·민중의 일상적 생존권 투쟁조차 빨갱이로 몰아 탄압하고, 앞으로도 이 시대착오적 망발을 계속해 나갈 수구세력들을 반드시 무력화해야 합니다. 그들은 남북교류와 합작, 통일도 흡수통일을 획책하고 북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기회로 삼으며 북의 노동자들의 노동 3권 행사를 수십 년간이나 봉쇄할 계획까지 세우고 있는 자들입니다.




이제 국내외 수구세력들의 이러한 반민족적, 반민중적, 반역사적, 반시대적 도발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으면 안 됩니다.

새로운 평화 시대, 통일 시대는 민족 구성원이라면 그 누구라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권리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시대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종전선언으로 시작하여 평화협정과 북미불가침 조약 체결, 북미수교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한반도 비핵화 과정은 한반도에 더 이상 남북, 북미 대결을 벌이로 한 냉전 대결 구도가 들어설 자리를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대결을 위해 남북 민족과 민중들의 인적, 물질 자산을 소모하는 어리석음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아가 새로운 평화의 시대에 전쟁 준비체인 동맹과 미군 주둔을 당연시하며 민족 자주성과 국가 주권을 스스로 부정하는 전도된 사고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판문점 선언 이행으로 구축될 민족경제공동체는 통일 한반도가 만주와 시베리아, 저 멀리 유라시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발판이자 민족 웅비의 웅대한 꿈을 실현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민족경제공동체 건설 과정도 정권과 자본의 독단을 막고 노동자·민중의 정치적, 경제적 권리가 함께 실현되는 과정이 되어야 함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이에 앞으로 전개될 한반도의 시대적, 역사적 대 전환기를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대결과 분단의 구시대로의 회귀를 막고 반드시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통일을 실현할 수 있도록 평화세력의 힘을 구축하고 키워 냅시다. 한반도를 뒤덮는 거대한 평화촛불을 조직하여 민주를 더욱 확대, 심화시키고 평화를 확고히 뿌리내리며 기필코 자주통일을 실현합시다! 한반도의 새로운 자주와 평화의 기운으로 동북아 다자공동안보체제와 비핵지대 구축을 선도합시다!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노동자·민중을 부르고 있습니다. 



7.28 평화홀씨마당 이모저모

“총을 내려라! 평화가 춤춘다! 통일이다”

3.24 평화촛불, 6.9 평화촛불에 이어 산마을학교, 숲나학교, 간디학교 학생들과 평통사 청년모임 회원들, 레츠피스 퍼커션 공연팀이 직접 그림을 그리고, 피켓을 만들고, 춤을 추고, 발언을 하며 자신들이 바로 평화의 새 시대를 살아갈 통일세대임을 선언하였다. 이종환, 김석민 회원은 재기발랄한 품바타령으로 노동자, 농민, 지식인과 종교인을 불러내어 새로운 평화시대의 주역으로 나서야 할 이유들을 소개하였다. 성주와 김천, 원불교는 남북미 평화의 시대는 사드를 뽑는 것으로 완성된다며 ‘함께가자 우리 이길’을 합창하였다. 군산 박운옥 부대표 등은 감동적인 목소리로 김남주, 고은, 송경동의 ‘삼팔선은 삼팔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껌데기는 가라! 대한민국은 평화를 원한다’를 낭송하였고, 순천과 부산의 평화홀씨 합창단, 평화의나무 합창단, 서울제일교회 강남향린교회 성가대 등이 화음을 맞춰 ‘비무장지대’와 ‘선언’을 합창하였다. 김태순 작가 등은 기존의 한반도 조각그림을 업그레이드하여 평화번영을 염원하는 300조각그림을 완성하였고, 풍물창작단 소용과 하애정 선생은 미대사관 돌레 행진을 이끌었다. 정수미, 서종환 회원의 사진과 강윤미 회원, 이상진 민주노총 부위원장, 이도흙 교수, 강문수 부산 대표의 발언을 싣는다.- 편집자 주

안녕하세요 평통사 청년회원 **강윤미**입니다. 반갑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한반도에서 끊임없는 핵대결과 전쟁위기가 고조되었습니다. 그런데 평창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북미 사이의 대화가 재개되었고, 평화의 물결따라 엄청난 속도로 남북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이 진행되었습니다. 조금만 한 눈 팔면 이렇게 급변하는 정세를 따라가기 참 어렵기도 합니다. 그래도 확실히 알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중요한 시기에 평화를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역할이 절실하다는 것입니다.

역사에 남을 만한 감동적인 순간을 우리가 이 짧은 기간 동안 수차례 목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을 줄기차게 요구하고 외쳐 온 시민의, 우리의 목소리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의 한 외침, 촛불 하나하나가 갖는 힘이 대단히 크게 느껴집니다.

우리 청소년과 청년이 지닌 힘도 굉장합니다. 지난 3.24와 6.9 촛불에서 청소년, 청년 마당을 기



억하시나요? 평화의 기운을 널리 퍼뜨리고자하는 활기차고 밝은 울림은 많은 시민들의 뜨거운 박수를 받았고, 보수단체 회원들마저 뉘 놓고 바라보게 만들었습니다.

평화와 자주통일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청소년, 청년들이 새로운 평화세력이 되겠습니다. 평화와 자주통일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외침이 한반도에 진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시대, 저희도 이 땅에 평화, 통일이 성큼 다가올 수 있도록 더 큰 평화의 물결에 동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주노총 **이상진** 부위원장입니다.

민주노총이 길을 낸 1700만 촛불이 정권을 바꿔냈지만 노동자의 처지는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노동자의 사회적 정치적 권리를 지키기 모든 투쟁이 종북, 빨갱이로 내몰리는 정치적 환경 속에서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사소한 투쟁도 용역과 국가공권력의 폭력에 맨몸을 내놓고, 단식에 굴복농성에 목숨을 걸어야만 했습니다.

일터에서 쫓겨나지 않고 법에 보장된 노조할 권리, 파업할 권리 누리는 게 진정한 평화 아니겠습니까? 노동자들이 노동 해방과 평등을 마음 놓고 외치고 모일 수 있는 게 진정한 평화시대 아니겠습니까?

기득권세력이 지배해온 70년 전쟁과 분단체제가 해체되면 노동자들의 처지는 근본적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기득권 세력이 약화되어 노동자 민중의 권리 향상, 노동, 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호조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 이행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할 가장 큰 이해를 갖고 있습니다. 평화의 새 시대, 새로운 평화운동, 자주통일의 길을 여는데 노동자가 주인으로 나서도록 있는 힘을 다하겠습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정의평화불교연대 상임대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반도에는 평화의 기운이 가득합니다.

올해 안에 종전 선언을 하고 평화협정도 맺을 듯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철도를 연결하여 북한과 그 너머 중국과 러시아를 자유롭게 오가고 경제, 문화와 학술 교류를 하며 남한과 북한이 모두 풍요로워지는 상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평화협정 이후 북한마저 미국과 재벌의 수탈 시장이 되고 남한의 분단모순이 별로 극복되지 못한 채 대미종속이 외려 심화한다면 그 평화가 과연 우리 민족과 민중에게 어떤 의미를 갖겠습니까. 문재인 정권은 이미 촛불정권에서 멀어졌고 재벌과 미국에 대해서는 저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주체는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아니라 바로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이어야 합니다. 냉전의 유산을 유지하려는 세력들의 음모와 방해공작으로부터 평화를 지켜내야 하는 주체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촛불에서 잘 보았듯이, 시민들이 정치적으로 조직화될 때만 변화는 이루어집니다. 남북한과 미국의 정상들이 노동자 민중의 이해관계에 부합하는 남북의 평화와 통일을 추구하도록 우리 노동자와 민중들이 견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 갈통의 지적대로 ‘구조적 폭력’을 없애는 적극적 평화를 추구합시다. 평화는 강정을 평화마을로 되돌리고 종북담론, 국가보안법, 대미 종속체제, 그리고 사드를 해체하고 민주적이고 자주적인 대한민국을 세우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평화의 법적 장치인 평화협정을 넘어 구조적 장치로서 한반도 평화 체제가 이루어질 때, 진정하고도 되돌릴 수 없는 평화가 굳건하게 자리잡고 통일의 길을 열 것입니다.

여러분! 평화로 가는 길은 없습니다. 평화가 길입니다. 바로 우리가 평화가 됩시다. 이 길에 우리 지식인들도 “한 사람의 열 걸음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부산 평통사 대표 **강문수**입니다.

폭염 속에서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동지여러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평화를 여는 가슴으로 노래하며, 통일을 여는 심장으로 춤추는 마음을 담아 인사합니다!
 여기 미 대사관 앞은 우리가 평화의 길을 열고 통일로 가는 길목에서 결코 지나칠 수 없는 곳
 이죠. 우리가 3.24촛불을 들자 4.27 판문점 선언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6.9촛불을 들자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이루어졌지요. 이제 북미간 후속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미국은 북미정상의 합의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북미관계의 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합니다.
 상호신뢰에 기초한 동시병행만이 북미관계 정상화를 이룰 수 있는 기본 동력입니다.

북은 핵실험장 폭파에 이어 미사일시험장도 폐기했습니다. 어제는 미군유해를 돌려보내기로
 한 합의를 이행했습니다. 이제 미국이 동시병행에 나설 차례입니다. 우리는 미국에 종전선언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65년간 미루어져온 북과의 적대관계를 청
 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북의 비핵화조치에 상응하여
 북미 불가침조약을 체결하고 수교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는 한미동맹과 결코 양립할 수 없습니다.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구
 축되면 주한미군은 대폭 감축하거나 철수해야 합니다. 소성리에 박힌 사드도 반드시 철거되어
 야 합니다.


동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한반도 냉전이 청산되고 평화가 정착되게 하는 원대한
 일을 정부당국에게만 맡겨놓을 수 없습니다.

한반도 평화통일의 주역은 노동자, 민중입니다. 새로운 역사가 쓰여지는 이 과정에 우리가 주
 체가 되어 민족과 민중의 지향을 담아내는 길을 스스로 개척해갑시다. 한반도 평화가 뿌리내리
 고 통일을 이루는 그날까지 변함없이 타오를 자주와 평화, 통일의 촛불이 됩시다.

이제 지역으로 돌아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화와 통일의 촛불을 더욱 뜨겁게, 더 널리 퍼뜨립시
 다! 평화의 새 시대를 주인답게 이끌어갈 새 주체를 모으고 세워냅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북미수교 동시실현! 전쟁없는 평화세상 미군없는 통일세상

평화의 새 시대 사드부터 뽑아내자! 노동자 민중이 자주평화의 주역으로 나서자!

평통사가 앞장서서 새 평화세력 모아내자! 



①

7월 31일부터 8월 5일까지 평통사 청년, 청소년 회원들끼리 제주도에 놀러갔습니다!

사실 놀기만 하지 않았고 강정대행진도 참가하고 평화에 대한 고민도 하고 앞으로 평통사 청년, 청소년 모임을 어떻게 운영할 지에 대해서 회의도 했답니다. 미리 내려가 계신 문규현 신부님과도 반갑게 인사나눴습니다.

저희는 강정대행진 일정 전부를 참가한 게 아니라 8월 1일 하루만 참가했습니다. 표선에서 성산까지 25km를 걸으면서 이 아름다운 곳이 제2공항 부지가 되어 버린다는 사실이 정말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고즈넉한 돌담길과 아욱, 나무들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사진 1, 2)

우리가 묵은 숙소인 평화센터에는 강정 해군기지 문제 뿐 만 아니라 일본 오키나와의 주일미군기지의 문제점도 알리고 있었습니다. 강정마을을 둘러보기 전 김동건 신부님께 평화센터에서 계시해 놓은 사진을 통해 오키나와 기지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김동건 신부님과 제주 해군기지와 강정천에 갔습니다.

③



청년, 제주평화기행

구성 : 이기는 청년 회원





해군기지를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구럼비가 있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구럼비가 우리의 상상 속 존재가 되어버린 현실이 비참했습니다. 그리고 강정천에 가서도 오른쪽 편에 보이는 해군기지가 왜 이렇게 밀게 느껴지는지.. (사진 3)

8월 3일에는 강정대행진의 마지막 행사인 문화제에 참가했습니다. 성산일출봉에 갔을 때 생각보다 규모가 커서 많이 놀랐어요. 제2공항반대 대책위분들이 오셔서 현재의 상황을 공유하고 특히나 소성리 할매들이 함께 연대를 하고자 공연도 준비하셨어요. 소성리 할머니분들과 노래에 맞춰서 몸을 흔들었는데 그렇게 환하게 웃으시는 모습을 처음 봐서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주의 아픔을 마음에 새기고 저희는 밤마다 성대한 파티(?)를 즐겼습니다! 이 요리(사진 7)는 스페인 요리인 감바스입니다. 제가 직접 요리를 했답니다. 항상 이렇게 일정이 끝나면 간단한 뒤풀이용 요리를 해서 청년과 청소년들이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에 왔으면 역시 고기국수를 먹어 줘야죠! 저희가 성프란치스코 평화센터에서 숙박을 했는데 걸어서 3분 거리에 고기국수 집이 있었습니다. 너무 맛있게 먹었던 것 같아요. 맛집으로 인정해도 될 정도였습니다. (사진 8)



국방개혁 2.0 기본방향 확정에 대한 평통사의 입장

1. 문재인 정부는 ‘국방개혁 2.0 기본방향’(이하 국방개혁 2.0)을 27일 확정하였다. ‘국방개혁 2.0’은 새로운 평화시대를 연 판문점 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준수하고 이를 뒷받침해야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은 말로는 “평화와 번영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국방부 보도자료, 7.27)을 표방하면서도 실제로는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에 위배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다. 국방개혁 2.0은 냉전수구적인 대북 위협인식은 전혀 바뀌지 않았고 대북 공격적인 교리와 작전계획을 여전히 고수하고 있으며 북한과 주변국을 겨냥한 공격무기 도입을 추구하는 등 군비증강에 골몰하고 있다.

또한 국방개혁 2.0은 촛불정권으로의 교체와 한반도 정세의 극적인 호전으로 그 어느 때와 달리 국방개혁을 전향적이고 공세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방개혁 1.0과 비교해 특별히 진전되었다고 볼 수 있는 내용이 없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사실상 무기한 연기하고 있으며,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통한 문민통제의 확립도 외면하고 있다. 특히 대폭적인 국방예산의 증액을 추구함으로써 ‘저비용 고효율’이라는 국방개혁의 핵심에도 정면으로 어긋난다.

이번 국방개혁 2.0은 판문점 선언의 이행을 가로막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반평화 반통일적인 안이자 국방개혁의 깊이나 의지 면에서 새로운 평화시대의 요구를 전혀 담지 못하고 있는 구태의연하고 시대에 낙후된 안이며 군의 기득권을 위해 국가재정을 낭비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방해하는 반개혁적 안이라고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국방개혁 2.0을 당장 폐기하고 새로운 평화시대에 걸맞는 국방개혁안을 재작성 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우선 국방개혁 2.0은 그 대북 위협인식이 변화된 정세를 무시하고 기존의 냉전수구적 정세관을 고집하고 있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안보위협 대응’을 국방개혁의 3대 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다. 국방부의 보도자료(7.27)에 따르면 ‘전방위 안보위협’이란 “북한의 현존위협은 물론 잠재위협과 비군사위협 등 다변화된 군사위협과 불확실성”을 가리킨다. 여기서 불확실성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진전의 불확실성’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

“냉전 수구적 인식 유지하며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에 위배하는
반평화 반통일적 안이자
저비용 고효율의
국방개혁의 핵심에
역행하는 반개혁안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 수립’이라는 남북 및 북미 정상 간의 합의를 불확실한 것으로 치부하고 나아가 대북 위협을 현존위협만이 아니라 ‘잠재위협’, ‘비군사적 위협’ 등 ‘전방위적인’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이는 남북미 정상의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합의로 북한의 핵위협이 더 이상 명분을 가질 수 없게 된 상황에서 어떻게든 새로운 북한 위협을 찾아내고 부풀림으로써 국방개혁 과제를 유야무야시키고 군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군 기득권 세력의 이기주의적 발상이다. 이런 대북 위협인식은 필히 남북간 군사적 대결을 조장하고 군비경쟁을 초래하게 되며 현재 남북 사이에 진행되는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국방 당국간 회담과 판문점 선언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된다. 이에 판문점 선언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게 될 ‘전방위적 위협 대응’이라는 국방개혁 2.0의 목표설정은 결코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3. 국방개혁 2.0은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과 작전계획과 선제공격전력 구축을 고수함으로써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반평화적, 반통일적인 안이다. 그간 우리 군의 군사전략은 북한을 공격·점령하는 대북 공격전략이었고 북한의 핵·미사일 사

혁신하는 국방 국민과 함께하는 국방

'국방개혁2.0' 추진



新작전수행개념

북한의 도발억제,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작전수행개념

- 북핵·미사일 능력의 고도화에 따라 '강력한 3축체계'에 기반한 억제 및 대응 능력 확보와 공세적 작전개념 정립 요구

軍 구조 개혁

정보·기술집약형의 공세적이고 정예화된 軍구조로 전환

新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한 지휘 및 부대구조 개편

- 韓·美 연합방위를 주도하는 미래 연합사령부 창설
- 신속·결정작전 수행을 위한 공세기동부대 (공정·기동·상륙 부대) 신편

'국방개혁2.0' 주요 내용

핵심 사안	주요 내용
신 작전 수행 개념	북 도발 때 최단 시간·최소 희생으로 승리 ※북한 지역에 공세기동부대 투입해 핵심지역 석권
북한 핵·미사일 대응	확장된 킬체인·한국형 미사일 방어·대량응징보복
병력 규모	62만 명 → 50만 명
장성수	430여 명 → 350명 수준(추정)
병사 복무기간	21개월(육군 기준) → 18개월
병사 봉급	연차적으로 최저임금 절반 수준 인상

이미지 출처 : 중앙일보

용이 임박하면 선제공격하는 맞춤형 억제전략을 채택하여왔다. 또 우리 군은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탐지·교란·파괴·방어하는 4D작전개념을 이행하기 위해 이른바 3축체계를 구축하여 왔다. 그러나 판문점 선언과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합의하고 남과 북이 무력불사용 및 불가침을 재확인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중지하기로 한만큼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맞춤형 억제전략 포함)과 4D 작전개념과 3축 체계 구축은 폐기되고 새로운 평화시대에 맞는 순수한 방어전략과 작전계획으로 바뀌어야 맞다.

하지만 국방부는 공세적 작전개념을 ‘입체 기동 작전’으로 이름을 바꿔 국방개혁 2.0의 한 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중앙일보, 2018년 7월 27일)고 한다. ‘공세적 작전’은 전쟁이 일어나면 공수 부대, 해병대, 기계화 부대를 동원해 한국군 단독으로 2주 안에 평양을 점령하는 개념이다. 또 국방부는 “현존하는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3축 체계(킬체인, KAMD, 대량응징보복) 전력은 정상적으로 전력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대북 공격적 군사전략을 이름을 바꿔 계속 추진하고 3축 체계 구축을 기존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한 국방개혁 2.0은 여전히 대북한 선제공격(북한 핵미사일 사용 임박시 공격)에 의거하고 있으므로 전쟁을 불법화한 유엔헌장 2조 위반이며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평화통일을 규정한 우리 헌법 위반이다. 특히 남북 정상이 합의한 판문점 선언에 대한 명백한 부정이며 군을 정치(문민)의 우위에 두는 행태로써 문민통제에 대한 거부이기도 하다. 또한 국방당국자들이 여전히 냉전수구적 사고에 사로잡혀 있다는 방증이며 핵대결을 지속함으로써 군기득권을 지키겠다는 이기주의적 사고의 발로이기도 하다.

4. 국방개혁 2.0은 문민통제에 대한 의지 자체가 결여됨으로써 국방개혁안으로서의 최소 요건도 상실하고 있다. 국방부는 실질적 문민화와 정치적 중립 보장을 위해 “국방부 5개 실장 직위 전원 민간 출신 인사로 임명하였고, 국과장급에 민간 공무원의 보임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국방부 보도자료 7.27)이며 “예비역의 문민간주 기준을 장차관은 전역 후 7년, 실국장은 전역 후 2년으로 설정하였”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장차관의 경우 전역후 7년이 되면 문민으로 간주한다고 한 것은 문민통제가 이미 확립된 미국, 독일, 일본 등의 군과 문민통제가 전혀 정착되지 않은 한국의 군을 동일시하는 것으로 이는 사실상 군인이 계속해서 국방장관을 독점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실국장의 경우 전역후 2년이면 문민으로 간주한다는 것도 퇴역군인의 실국장 임명을 사실상 보장해주는 것과 다름없다.

국방장관을 순수 민간출신으로 임명하는 것은 문민통제의 기본이다. 대통령은 통수권을 국방장관을 통해서 행사한다. 만약 군의 초권위주의와 특권이 몸에 배어 있고 군인 중심의 사고

방식에 물들어 있으며 군 기득권 세력과 유착되어 있는 자가 국방장관이 된다면 대통령의 군통수권이 제대로 행사된다는 보장이 없다. 뿐만 아니라 국방장관이 군 기득권 세력의 입장에서 대통령을 보좌하게 됨으로써 대통령의 군통수권 행사가 도리어 군의 기득권을 용인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현재 국방부의 차관이 합참의장, 각군 본부 참모총장 등에 이어 국방부 서열 11위에 머물고 있다. 이런 서열 구조는 합참과 각군 본부에 대한 국방부 본부의 문민통제를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 실질적 문민통제를 위해서는 군인을 민간관료에 비해 2직급 높게 대우하도록 한 군인에우지침이 폐기되어야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국방개혁 2.0은 아무런 언급이 없다. 특히 기무사 작성의 계엄령문건의 폭로로 지난 박근혜 탄핵정국에서 기무사가 군사쿠테타를 모의하였음이 밝혀졌다. 이는 군에 대한 문민통제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생생히 증언해준다. 이 점에서 국방개혁 2.0이 눈감고 야용하는 식의 문민통제 방안을 거론하는데 그치고 있는 것은 문민통제에 대한 국방부 수뇌부의 소극적 인식과 군 기득권 세력의 뿌리 깊은 반감을 반영한다. 이제 판문점 선언에 따라 우리 군은 북한과 군사적 신뢰구축 및 군축을 실현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새장을 열어야 할 임무를 안게 되었다. 이 임무는 당연히 군 기득권과 충돌하지 않을 수 없고 따라서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실현하자면 군에 대한 확고한 문민통제는 지금 바로 실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순수

민간출신 국방장관의 임명과 군인에 대해 2직급 높은 대우를 규정한 군인에우지침부터 폐지되어야 한다.

5. 국방개혁 2.0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에 대해서도 그 일정을 명시하지 않고 이명박 및 박근혜정부 때의 ‘조건에 따른 전환(환수)’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을 조기에 확보하여 우리 군이 주도하는 지휘구조로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전시작전통제권은 우리 군사주권의 핵심으로 ‘능력확보’를 이유로 환수를 미루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특히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필수능력으로 ‘3축 체계 전력’과 ‘전략적 억제능력(감시·정찰 전력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구축,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꼽고 있다. 이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명분으로 추구해 왔던 것으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합의한 판문점 선언과 북미 공동성명을 부정하는 것이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뒤로 미루겠다는 것이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계속 미루는 것은 한국군이 미국의 동북아 군사전략에 편입되는 것을 초래할 뿐이며 우리 군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 패권전략에 휘둘리게 된다. 즉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없이는 국방개혁에서 요구되는 육군 위주의 대병력주의로부터의 탈피와 3군 균형 발전, 합동성 강화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나아가 새로운 평화시대에 맞는 방어적인 군사전략을 수립하기 어렵고 그에 따라 남북의 군사적 신뢰구축과 단계적 군축을 규정한 판문점 선언의 이행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없이는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필수적인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주도할 수도 없다.

이에 국방개혁의 온전한 실행과 완수, 한반도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수행, 동북아시아지역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의 주도를 위해서 전시작전통제권의 즉각적인 환수는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 더구나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국민에게 약속하였다. 따라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한없이 미루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폐기되고 재 작성되어야 하며, 전시작전통제권을 즉각 환수해야 한다.

6. 새로운 평화시대에 걸맞게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정예군화는 한국군의 내적 요구로서만이 아니라 군축 차원에서 추진해야 할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군조직 개혁은 군축에 대한 고려는커녕 각군의 경쟁적인 몸집불리기를 용인하고 있어 군조직 개혁안이 아니라 개악안이다.

제1군 및 제3군을 통합한 지작사령부 창설은 국방개혁 1.0에서 결정된 것을 시행하는 것에 불과하다. 하지만 한반도의 좁은 지형과 짧은 전선으로 볼 때 야전군사령부는 불필요하고 군단만으로도 전쟁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다. 군단도 현재 8개인데 한반도의 지형적 조건이나 첨단무기와 장비를 갖춰 군단의 작전반경이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하면 이는 절반이하로 줄여야 한다. 하지만 국방개혁 2.0은 군단의 감축 계획도 밝히지 않고 있다. 더욱이 각 군이 경쟁적으로 몸집불리기에 나서고 있어 국방부가 군조직 슬림화보다는 군기득권 유지에 더 큰 관심이 있지 않는가 의심이 든다. 육군은 입체기동부대를 창설할 예정이고 해군은 기동전단과 항공전단을 확대 개편할 예정이며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할 예정이고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이다.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간부 중심의 정예군화를 위해서는 현재 61.8만 명에 달하는 대병력을 최소한 30만 명 이하로 줄여야 한다. 그러나 국방개혁 2.0의 상비병력 50만명으로의 감축계획은 종전 보다(52.2만명)다소 감축 폭이 늘었으나 애초 국방개혁기본계획 2020 (2006년)의 50만명 감축목표로 되돌아간 것일 뿐이다. 상비병력 50만명으로 감축은 인구의 자연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이지 진정한 의미의 국방개혁이라고 보기 어렵다. 더구나 남북은 판문점 선언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단계별 군축에 합의하고 있다. 남북이 방어충분성(NOD) 원칙에 서서 기습공격과 대규모 공격능력을 제거하여 실질적인 전쟁위험을 없애고

평화체제를 수립, 정착시키려면 남과 북은 각각 병력을 30만 나아가 20만명으로까지 감축해야 한다. 이 점에서 상비병력 감축목표치를 50만명으로 제시하고 있는 국방개혁 2.0은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정예군화라는 한국군의 내적 과제로 보나 평화체제 수립의 과제로 보나 개혁의 요구에 전혀 부응하지 못한다.

7. 국방개혁 2.0은 장성 정원을 436명(2018년)에서 2022년까지 360명으로 76명을 감축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런 소극적인 장성감축으로는 방만한 고급장교 운영과 그에 따른 과도한 인건비와 군조직의 비대화 문제를 풀 수 없다. 장성 못지않게 중령과 대령 정원도 과도할 정도로 팽창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감축계획은 없다. 그리고 76명의 장성감축은 군조직의 구조조정을 극히 억제한 가운데서 산출된 숫자라는 점에서 명백한 한계가 있다. 과도하게 부풀려진 장성 정원을 정상화하려면 76명의 2~3배가 감축되어야 한다. 김종로 의원은 국방개혁을 제대로 하려면 “몇명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장군 수를 지금 반절로 줄여야 됩니다”(2017년 8월21일 국방위)라고 말하고 있다. 군인사법 제16조의2(장성급 장교의 보직 등)의 단서조항에 의해 정원 외 장성직위가 광범하게 운영되어 왔는데 이 단서조항폐지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다는 것은 사실상 방만한 장성인력 운영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국방부는 “교육, 군수, 행정 등 비전투부대의 계급 적정화를 통해 장군직위를 감축하되 상비사단 부사단장, 잠수함사령부 부지휘관 등 전투부대의 장군직위는 오히려 보장하

여 전투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상비사단 부사단장을 장성직위로 보임하는 것과 전투력 강화는 아무 상관이 없다. 상비사단의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이 아닌 영관급을 보임한다고 해서 그것이 전투력에 저해된다는 논리는 육군의 장성직위감축을 어떻게든 최소화하려는 구실에 지나지 않는다. 지금까지 부사단장 직위가 전역을 앞둔 장성을 임시로 보임하기 위한 자리로 널리 이용되어 왔는데 부사단장 직위에 장성을 보임한다는 것은 이런 관행을 계속하겠다는 것이다.

8. 국방개혁 2.0은 3군의 균형적 발전과 합동성 강화에도 역행한다. 병력을 50만명으로 줄이고 장성정원을 360명으로까지 축소해도 육군 중심의 불균형적인 병력구조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현재 상비병력 61.8만명은 국방개혁 2.0의 병력감축 계획대로 되면 2022년에 육군은 48.3만명에서 36.5만명으로 줄고 해군과 공군은 현재대로 각각 7만명, 6.5만명이 된다. 2022년 전체 50만 병력 중 육해공군의 비율은 73% : 7.0% : 6.5%로 여전히 육군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한다. 『밀리터리 밸런스』(2016년판)를 보면 미국이나 일본, 대만, 독일의 경우 전체 현역병력 중 육군의 비율은 33.8(독일)~61.1%(일본) 사이이다. 한국육군이 2022년 36.5만명으로 준다면 그 비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22~40% 정도 높다. 장성정원의 경우 육군은 2022년까지 계획된대로 66명 장성정원이 줄어도 247명을 유지한다. 이는 해군장성 59명, 공군장성 54명과 비교해 각각 4.2배 및 4.6배로 그

불균형이 매우 심하다.

9. 판문점 선언에 따라 남북이 군사적 신뢰구축과 상호 군축을 이행해 나간다면 국방예산은 당연히 삭감되어야 한다. 그런데 국방개혁 2.0은 막대한 국민세금을 한반도 평화를 위태롭게 하고 우리 안보를 해치는 데 쏟아 부으며 타 부문과의 균형적 성장 특히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도외시키고 있다는 점에서도 그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


국방부는 국방개혁 2.0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향후 5년간(19~23년) 270.7조 원(연간 54.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며 이를 확보하려면 국방비의 연평균 증가율이 7.5%가 되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 같은 국방비 증가율은 정부 재정 증가율(2017~2021년간 연평균 5.8%)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고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의 국방비 증가율을 상회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대폭 인상되는 국방비는 그 대부분이 정작 한반도의 평화와 우리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데 쓰여진다는 점에서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 국방부에 따르면 방위력개선헌비(무기도입비)를 2019~2023년 사이 94.1조원으로 추정한다. 3축 체계 구축에 소요되는 예산이 57조원이기 때문에 무려 방위력개선헌비의 60%가 3축 체계 구축에 쓰이는 셈이다. 판문점 선언의 이행에 중대한 장애를 조성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을 촉발하는 3축 체계 구축을 위해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는 것은 막대한 자원 낭비이자 저비용 고효율의 선진군대로 거듭나겠다는 국방개혁의 취지에도 정면으로 반한다. 향후 5년간 연 7.5%의 국방비 인상은 오로지 국내 및 국외의 군수자본의 배만 불리는 것이다.

또 3축 체계 구축 등을 위해 국방예산을 대폭 증액하는 것은 반민생, 반복지라는 점에서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 고율의 국방비 인상은 정부 재정을 압박해 저임금노동자와 빈곤한 농민, 실업자, 불안정 고용자, 대기업의 횡포와 격심한 경쟁에 내몰리고 있는 영세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광범한 고령층 등 국민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회경제적 약자에 대한 정부의 지원을 제약하고, 이어 서민의 소비지출을 극히 낮은 수준으로 억압함으로써 경제발전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국방부는 국가재정이나 국민경제 사정이 어떻든 무조건 국방비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과거 군사독재정권 때의 사고방식에서 탈출해야 한다.

10. 국방개혁 2.0은 동북아시아지역을 대상으로 군비경쟁을 노골적으로 표방함으로써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에도 반한다. 국방개혁 2.0은 “전방위 다양한 위협에 대한 신속대응”을 명분으로 “해군은 수상·수중·항공 등 입체전력 운용 및 전략기동 능력구비”를 추진하고 “해병대는 상륙작전능력 제고를 위해 해병사단의 정보·기동·화력능력을 보강할 예정”이며 “공군은 원거리 작전능력 및 우주작전 역량 강화를 위해 정보·감시·정찰자산

전력화와 연계하여 정찰비행단을 창설할 예정임”을 밝히고 있다. 이런 해군의 전략기동 능력 구비나 공군의 원거리 작전능력과 우주작전 역량 강화, 또 해병대의 정보·기동·화력능력 보강은 한반도를 뛰어넘어 동북아시아까지를 작전범위로 하는 군사능력을 확보하겠다는 것으로 우리 군이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겠다는 신호라고 할 수 있다. 국방개혁 2.0은 또 “군 정찰위성 등 감시·정찰 전력을 최우선 확보하며, 미래의 다양한 도전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원거리 정밀타격능력을 강화하는 등 전략적 억제능력을 지속적으로 확보해 나갈 것”임을 밝히고 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를 원거리 정밀타격능력과 감시정찰 전략과 함께 전략적 억제능력의 주요 요소로 규정한 것은 KAMD가 비단 북한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 러시아 등 주변국의 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 차원임을 시사한다. 국방개혁 2.0은 “동북아시아 경쟁과 군비증강, 초국가·비군사적 위협 증대 등 지역안보의 불안정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고 쓰고 있다. 이런 지역정세인식은 동북아시아를 대상으로 한 우리 군의 군비경쟁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설사 미일 대 중러간 전략적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군이 군비경쟁을 하며 끼어들어야 할 근거가 될 수 없음은 물론이다. 미일 대 중러의 진영 간 대결에 한국이 끼어든다는 것은 곧 한국이 미일과 손잡고 중러와 대결하는 것을 뜻한다. 이는 사드체계의 남한배치에서 입증되었듯이 한반도

를 미중 대결장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우리 스스로 쏠을 지고 불에 뛰어드는 격이다.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지역의 평화와 안정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에 직결된다. 한반도 평화체제가 공고해지려면 동북아시아에서의 국가 간 또는 진영간 대결을 어떻게든 막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동북아시아에서 평화공동체(다자안보공동체)를 설립해 모든 분쟁을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무력사용을 금지해야 하며 군비경쟁이 아닌 신뢰구축과 군축을 통해서 무력충돌의 가능성을 낮춰야 한다. 이에 동북아시아지역에서 군비경쟁에 가담함으로써 한반도의 위기와 외세각축장으로서의 전략을 가져오게 될 국방개혁 2.0은 용인될 수 없다.

11. 지금대로 국방개혁 2.0이 실행된다면 문민통제, 전시작전통제권의 조기 환수, 비대한 군조직의 슬림화와 복잡한 군 지휘구조의 단순화, 방만한 고급장교 인력의 대폭 감축, 3군 균형발전, 합동성 강화, 국방예산의 효율적 운용, 방산비리 척결 등의 개혁과제의 실현은 어느 하나 기대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 그렇기는커녕 군이 냉전적 대북 위협인식을 고수하면서 북과의 군비경쟁을 계속하고 나아가 동북아시아의 군비경쟁에 뛰어들면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이라는 시대적 국민적 과제 실현이 중대한 장애에 부딪힐 것임이 명백하다. 이에 국방개혁 2.0을 폐기하고 대신 새로운 민간출신 국방장관 하에서 국방개혁을 시대의 요구에 맞게 재추진해야 한다. (2018년 8월 4일) 

이제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할 때다

– ‘기무사 계엄령 문건’ 사태를 계기로 진정한 문민통제 시작해야

이기훈 청년 회원

시민이 광장에서 평화롭게 촛불을 들고 민주주의를 쫓아내고 있었을 바로 그때. 뒤편에서는 국민들을 총칼로 진압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니 머리털이 곤두섰다.

논란이 되고 있는 ‘기무사 계엄령 문건’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정권을 위해 유가족들을 조직적으로 사찰하고 여론을 조작해왔다니...

이게 정말 대한민국인가 절망스러웠다.



청와대에서 기무사 계엄령 문건의 실행계획을 입수해 발표 (이미지 : 비디오머그)

국군기무사령부(아래 기무사)는 본 임무에서 벗어나 정치 공작을 자행하고 군사쿠데타를 주도했으며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하는 의혹을 받는 등 역사의 고비마다 민주주의에 크나 큰 오점을 남겨왔다. 더욱이 이번 일은 ‘계엄령’의 목적이 정권을 유지하고 정치권력을 보위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국가를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

지시한 사람, 실행한 사람, 보고받은 사람, 방관한 사람 모두 처벌받아야 하며 이번만큼은 해체를 포함한 확실한 개혁을 단행해야 한다. 우리가 마주한 역사의 후퇴를 더 이상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문제를 바로잡고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디서부터,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기고된 글이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456336

국회 입법조사처는 ‘기무사 계엄검토 문건’에 대해 국법 질서 자체를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위법이자 위헌”이라고 결론 내렸다(JTBC 7월 18일 보도). 이번 일을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국가범죄’로 규정한 것이다.

군대 그리고 문민통제

우리 헌법은 군대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5조 2항) 군대의 역할을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에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또 여기에는 군대는 자신들의 영역이 아닌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영역에는 개입해서는 안 되며 진출하여서도 안 된다는 의미까지 포함돼 있다(임천영, <군인사법>, 2007. 9. 8).

군사정권이라는 아픈 역사를 거울삼아 다시는 군대가 무력으로 정치를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의지가 투영돼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밝혀진 기무사의 정치개입과 민간인 사찰은 자신들의 영역과 권한을 벗어나도 한참 벗어난 명백한 위법, 위헌인 것이다.

또 군대는 ‘안전보장과 국토방위’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권력(무력)을 가진다. 물론 이 권력 또한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국민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그래서 그 권력(무력)도 예외 없이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하며 국민에 의해 통제돼야 한다. 이것이 바로 정치 주체가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의 원칙이다. 따라서 군대의 위법하고 위헌적인 활동이 계속 되풀이되는 이유는 정치 주체인 국민의 힘이 닿지 않아서 즉,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다.

‘문민통제’는 다양한 법과 제도로 구현되고 있는 민주주의의 원리이며, 결코 추상적이거나 공상적인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도 ‘문민통제’를 위해 다양한 법과 제도를 두고 있다. 우리 헌법은 “군인은 현역을 면한 후가 아니면” 국무총리에도 국무위원에도 임명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헌법 86조 3항, 87조 4항).

특히 국방부장관은 국민이 뽑은 민선대통령의 명을 받아 합동참모의장과 육·해·공군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하도록 돼 있다(국군조직법 8조). 국민으로부터 나온 권력이 대통령과 국방부를 통해 군대를 통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문민통제’를 위한 법과 제도는 많지만 대부분 지켜지지 않거나 형식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양복입은 군인’으로 대변되는 국방부장관이다. 앞서 말한 것처럼 국방

부는 국민을 대신해서 군대를 통제하는 문민통제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의 장, 국방부장관은 군대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합리적이고 냉정하게 군대를 통제할 수 있는 ‘민간인’이어야 한다.

실제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하

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 법과 제도에도 5.16 쿠데타 이후에 제대로 된 ‘문민 국방장관’을 임명한 적이 없다. 하나같이 그 안에 군인의 생각과 마음이 가득한 ‘양복입은 군인’에 불과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던 국방장관 (이미지 : KBS)

‘문민통제’는 진보·보수를 논할 수 없는 헌법적 명령이며, 평화의 한반도를 살아갈 우리가 당면한 과제다. 문재인 정부가 ‘문민 국방장관 임명’을 공약하고, 전직 해군참모총장인 송영무 국방장관이 “국방개혁의 기둥은 문민통제 성립과 3군 균형발전”이라고 발언한 것도 이런 맥락 위에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문민통제’를 확립할 수 있을까?

‘문민 국방장관’ 이 필요한 이유

대부분의 제도나 정책이 그렇겠지만 ‘문민통제’는 단기간에 이뤄질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명확한 목표와 방향을 가지고 꾸준히 성과를 이뤄나가야 한다. 나는 그 첫걸음이 ‘문민국방장관 임명’이 돼야 한다고 말하고 싶다.

왜냐하면 첫째, ‘문민통제’를 추진할 동력을 가지고 꾸준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주요 직급에 대한 문민화가 먼저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참여정부 때 법제화된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에는 “군인이 아닌 공무원의 비율이 연차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민화가 유의미한 것이 되기 위해서는 내부에서 실질적으로 힘을 발휘하며 지시를 내리는 고위직급에 대한 것이어야 한다. 앞서 말한 ‘문민 국방장관’을 보유한 나라들의 국방부(일본의 경우 방위성)가 다른 직급의 문민화 비율보다 실·국장급의 문민화 비율이 훨씬 높은

것도 같은 원리다.

우리나라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 실·국장급의 문민화 비율을 높여가는 것에 대해 ‘문민통제’의 진전이라는 평가가 많다. 만약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된다면 실·국장급을 문민화하는 것과 는 차원이 다른 ‘문민통제’의 큰 진보를 이룬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국방개혁의 성공을 위해서도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국방개혁은 방만하고 비대한 군대를 저비용·고효율의 군대로 거듭나게 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며 ‘문민통제’는 국방개혁의 대전제다. 능력과 필요에 맞지 않게 많은 병력과 예산을 유지해온 우리나라에서 국방개혁은 역대 정권 모두의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군대의 강한 몸부림과 왜곡된 안보이데올로기에 막혀 번번이 실패하고 말았다. 하루가 다르게 변해가는 한반도 정세에 따라 그 어느 때보다 국방개혁의 절실함이 대두되는 지금, 이 절호의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이런 때일수록 군 내부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일관성 있고 균형 있게 국방개혁을 추진할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한편, 정부의 내각 개편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교체해야 한다는 여론도 커지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공직자에 어울리지 않는 언행과 ‘판문점 선언’을 거스르는 국방개혁을 내놓으면서 받아왔던 국민들의 비판이 이번 ‘기무사 문건’ 사태를 방관한 것을 계기로 한꺼번에 분출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여론에도 불구하고 일부 국회의원들은 “송영무 장관을 국방개혁의 책임자로 보기 때문에 사퇴를 운운하는 것은 동의하지 못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의원들의 주장대로 송영무 장관은 국방개혁의 책임자일까?

지난 19일 취임한 심승섭 신임해군참모총장은 취임사에서 “지금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의 새 시대로 나아가는 대전환기”로 이러한 때일수록 군은 본연의 위치에서 강한 힘으로 정부의 정책을 든든하게 뒷받침해야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군대의 방향도 결국 정치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을 명확히 밝힌 것이다.

그런데 송영무 장관은 지난 ‘판문점선언’ 이후에 열린 ‘국민참여 국방예산 토론회’에서 “(2023년까지) 3축체계가 완성될 것”이며 “이 시기(2023년)에 북한을 완전히 제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내년에 50조 원(2018년 43조 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3축 체계(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체계)는 선제공격을 상정한 개념이다. 뿐만 아니라 ‘평화와 번영, 통일’을 천명하고 ‘일체의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하기로 한 ‘판문점선언’에 정면으


로 반한다. 또 저비용·고효율이 국방개혁의 목표임에도 50조 원의 국방예산을 요구하겠다는 것은 군 기득권을 지키는 데에 앞장서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발언이 보여주듯 송영무장관은 정치에 따라 국방개혁을 추진할 책임자가 결코 아니다.

셋째, 새로운 한반도 평화시대에 부합하고 국민들의 신뢰는 받는 군대가 되기 위해서도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돼야 한다.

4.27 판문점선언, 6.12 싱가포르 성명들과 그 이행과정을 통해 우리는 새로운 평화의 시대가 왔음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종전선언, 평화협정, 북미관계 정상화에 이르기까지 이전에는 대결과 전쟁에 가려 보이지 않던 것들이 이제는 점점 현실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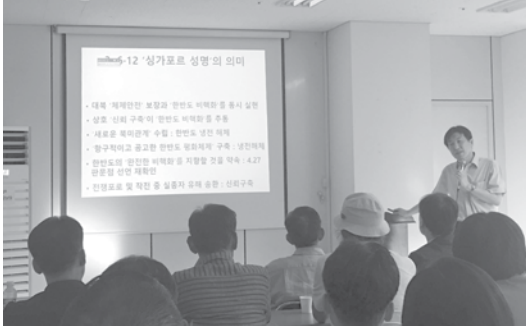
또 평화로운 한반도를 뒷받침할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 논의도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이렇게 때문에 이런 변화에 발맞춰 앞으로 일어날 수 있는 크고 작은 갈등에 대해서도 이전의 군사적 방식을 추구하기보다 외교적·정치적 해결방식을 모색하고 구사할 수 있는 ‘문민 국방장관’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문민 국방장관’이 임명은 군대가 다시금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게 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문민 국방장관’의 임명은 우리 군대가 국민을 위해, 그리고 국민에 의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상징적이면서도 실질적인 조치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문민통제’를 위해 ‘문민 국방장관’이 절실한 이유를 생각해봤다. 물론, 나는 ‘문민 국방장관’만이 정답이라고 말하고 싶은 게 아니다. 그러나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 있다. 바로 우리가 경험한 역사의 후퇴를 성찰하고 새로운 평화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한 그 길 위에서 ‘문민 국방장관’은 가장 힘 있고 기분 좋은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기무사 계엄 문건’사태를 계기로 문재인 정부는 약속을 지키고, 우리는 그 첫걸음을 내딛을 수 있기를 소망해 본다. 

♥ 광주

7/15 평통사 중앙과의 간담회 진행



지난 7월 15일(일)에 중앙의 고영대 공동대표와, 김강연 사무처장과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광주, 목포, 나주, 무안, 순천, 광양 등 광주전남 각지에서 활동하는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과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평통사의 조직적 과제'라는 3가지 주제로 진행했습니다.

'판문점 선언, 북미정상회담의 의미와 향후 전망' 주제는 지희준 회원이,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주제는 서종환 회원이 각각 발제하고 고영대 공동대표가 질의응답하는 형식으로 진행했습니다. 특히, 최근 진보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평화협정 체결 후의 주한미군 주둔에 관한 문제는 유엔사 구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을 다시 상기하면서 공부하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3시간이 넘는 시간동안 간담회를 진행했음에도 '평화협정 체결 후에도 주한미군 주둔?', '평통사의 조직적 과제'라는 주제에 대해서는 시간이 부족해서 마무리를 다 하지 못했을 정도로 진지하게 진행됐으며, 추후 2차 간담회를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7/28 평화홀씨 한마당 참가

727평화홀씨 한마당을 전남 서부권지역 회원들과 버스 두 대를 나눠 타고 갔다 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무엇보다 정치발언을 했던 김용호, 김수영 회원, 품바를 했던 이종환 회원, 종교인의 눈으로 바라보고 활동하는 모습을 애기한 이정훈 회원, 장엄한 선율의 합창을 보

여준 순천 합창단, 풍물패 행진에도 참여했던 회원들 등 아는 얼굴들이 많이 참여해서 뿌듯했습니다.



이날 행사에 참여한 홍영애 청년 회원은 “대체적으로 좋았던 것 같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몇몇 시민들도 동참하는 부분들이 특히 좋았고 시간 준수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람찬 행사고 취지도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버스에서도 교육 감사했습니다.”

광양평통사 정일태 사무국장은 “준비하느라 실무자분들 고생이 많으셨겠다. 먼 길 달려 올라가서 다양한 행사를 봤는데 연구소가 준비해서 왜 우리가 투쟁해야 하는지 정세에 관한 작은 손책자라든가 강연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상은 아주 좋았습니다”는 의견을 밝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수영 회원은 “흥겨운 공연들이 많아서 좋았습니다!! 우리가 주역이 되자. 노동자 민중이 주역이 되자는 주제의식은 잘 전달되었습니다. 이번행사 너무 좋았어요~!!!”라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김해동 청년 회원은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 때는 군에 있었고 1차 촛불과 2차 촛불때에는 실습 중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들로 이런 중요한 순간에 참여하지 못했었는데, 이러한 이유로 사드가 우리나라에서 없어져야 하고 평화협정이 맺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지만 내가 나서야 한다는 생각은 점점 사라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7.27 행사를 통해 나도 나서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교수, 교사, 노동자 등 다양한 분들이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도 이 일을 같이 병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행사에 참여한 분들을 보고 알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나보다 교수, 노동자 분들이 더 일상에 충실해야 할지도 모르는데, 그럼에도 이 일을 같이 병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충분히 반성해보고 돌아볼 계기가 되었습니다.

광화문에서의 행진은 내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야 집회와 1, 2차 촛불 때 이 곳에 없었던 것이 매우 후회가 되었습니다. 개인적인 이유로 참여를 못하면서 가졌던 내가 나서지 않아도 누군가 나서겠지라는 생각이 정말 정말 후회가 되었습니다. 더 공부하고 더 참여하고 더 목소리를 높여야 겠다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의 목소리가 더해져서 더 큰 소리 아니 외침이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소리가, 행동이 큰 변화는 일으키지 못할지 모르지만 이것이 나 비효과가 되어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불러 모으고 또 다른 사람들, 이렇게 큰 태풍이 되어 평화가 올 것이라는 생각을 했습니다.”는 소감을 남겼습니다.

| 서종환 |

♥ 나주

2018 나주평화통일축전 진행

‘가자! 평화와 통일로!’라는 주제로 2018 나주평화통일축전이 2018년 8월 7일 화요일 오후 6시 30분에 나주시 빛가람동 호수공원 야외공원장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판문점 선언이행을 위해 6.15 공동선언실천 나주지부(약칭 6.15나주지부)에

서 주최하고 2018 나주평화통일축전 추진위원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나주평통사는 6.15지부 참가단체로 함께하였습니다.

6.15 나주지부 김병균 상임대표 인사말을 시작으로 ‘민족 분단 73년! 이제는 끝내야 한다. 한반도여, 조선반도여 평화와 통일을 노래하라!’ 2018 나주평화통일축전 문화행사가 열렸습니다.



다문화가정 결혼이민자 여성들로 구성된 라온다문화합창단 노래와 나주평통사 조성환 회원님이 참여하는 멜로디아의 통기타 연주, 정소영 회원 자녀 송현주 학생의 국악공연, 초청가수 안치환 등의 공연이 있었습니다.

체험마당에서는 통일 떡, 음료 나누기, 한반도가 나누기, 통일의 바람 실팽이 만들기, 통일염원 부채만들기 부대행사가 있었습니다. 나주평통사는 통일부채만들기 부스를 운영하였습니다.



행사 준비 중 천둥을 동반한 소나기로 시민들 참여가 저조해 보였으나 평화통일을 바라는 나주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 양이화 |

♥ 대구

7.27 정전협정 65년 평화협정 체결 촉구 기자회견



7월 27일 대구지역 시민단체들과 함께 대구캠프워크 앞에서 한반도 비핵화,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사드 폐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미경 회원이 문규현 상임대표의 한겨레신문 23일자 칼럼을 대독하며 평화와 자주통일의 주역으로 평화의 새시대를 열어갈 것을 다짐하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2018 평화홀씨마당, 성주 김천과 함께 참가



7월 28일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2018 평화홀씨마당에 성주 소성리 주민들, 김천시민들과 함께 참여했습니다.

| 이기자 |

♥ 마창진

7월 11일, 원불교 마산교구 회관에서 7월 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앞으로 마창진 모임은 부산 평통사 지역모임으로 운영됩니다. 다음모임은 8월 8일, 원불교 마산교구 회관입니다.



| 박석분 |

♥ 보령



고영대 대표 정세강연회 열어

보령 민주시민강좌 시리즈 첫 강좌로 고영대 공동대표가 7월 25일, 보령 문화의 전당에서 “남북/북미 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강연은 북미 정상회담의 의미와 쟁점을 설명하고 과제를 제시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시종 진지한 자세로 강연을 경청했습니다. 특히 쉽지 않은 한미상호 방위조약과 유엔사 해체문제 등에 대한 설명에 참가자들의 관심이 집중되었고 질문도 쏟아졌습니다.

이날 강연에는 30명의 평통사 회원들을 비롯하여 주 최 단체인 보령 민주단체협의회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 권진복 |

♥ 부산

6/26~27 방위비분담 협상 대응 릴레이 1 인시위



부산평통사는 10차 방위비분담금 협정 4차 협상에 즈음하여 방위비분담금의 대폭 삭감을 촉구하는 1인시위를 진행하였습니다. 출퇴근시간과 점심시간, 하루 세 차례 진행된 1인시위에 12명의 회원들이 참가했습니다.

7.8 부산 평화의 촛불



2018년 7월 8일 부산 평화촛불 (자주평화와 통일염원 2018년 평화홀씨마당)을 개최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원화와 효순미선 추모 그림전도 열었습니다.

7월 8일(일) 오후 7시 서면에서 자주평화와 통일을 염원하는 부산평화촛불이 열렸습니다. 이 행사는 부산평통사가 2015년부터 매 해 진행한 평화홀씨마당으로, 올해는 거리집회로 진행했습니다. 청년 이창행 군이 사회를 맡아 청년의 역할을 높여낸 이 행사는 회원과 회원 가족, 지인 등 80여 명이 참가했습니다.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의 의미를 전달한 영상과 발언, 합창홀씨 공연, 주한미군 문제에 대한 청년 발언과 유럽으로 평화기행을 가자는 평화발자국 성원들의 제안, 오카리나 공연 등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리

고 소성리 임순분 부녀회장을 모셔 말씀을 듣고 후원금도 전달했습니다.

부산평통사는 7월 8일 평화촛불을 시작으로 앞으로 매달 평화촛불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7월 9일부터 27일까지 책과아이들 평심갤러리에서 평화의 소녀상 원화와 효순미선 추모그림 전시도 진행했습니다. 이 전시는 해마다 진행한 평화홀씨전의 일환으로, 청년모임이 주관했으며 회원들이 당번을 정해 매일 지킴이로 나서주었습니다. CBS 라디오에서 이 전시회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7. 22 부산~베를린 평화열차 참가자 모임



7월 8일 평화촛불 캠페인을 통해 부산~베를린 평화열차타기에 신청한 분들이 첫 모임을 갖고 평화열

차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평화의 시대를 맞아 제일 실감나는 건 북한을 거쳐 유럽까지 가는 일이죠. 이에 평화 발자국이 야심차게 준비한 대중사업입니다. 신청자 50명 중 이날 참가한 분들은 13명입니다. 앞으로 매 달 모임을 갖고 평화시대 정세도 공부하며 평화열차타기 준비에 나서게 됩니다.

7. 14 故 이월신 회원 추도식

부산 평통사 창립을 위해 애쓰셨던 이월신 전 감사가 7월 13일 암투병 끝에 타계했습니다. 평통사는 고인을 기리며 14일 추도식을 열었습니다. 평화통일을 위해 헌신하신 선생님의 명복을 빕니다.

| 김건우 |

♡ 서울

6월 서울 평통사 회원의 날



6월 27일(수), 오후 7시에 서울 평통사 회원의 날을 진행했습니다. 마침 이 날이 월드컵 한국전 경기가 있는 날이어서 원래 장소인 광화문 KT앞에서는 거리 응원전을 위해 건너편에 설치된 대형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각종 소리 때문에 도저히 촛불을 진행할 수 없었습니다. 긴급하게 외교부 뒷문 쪽으로 장소를 옮겨 촛불을 진행했습니다.

다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그래도 회원분들이 함께 참여하여 평화통일의 마음을 모았습니다.

중앙과 서울 평통사 간담회



7월 18일(수), 현 정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그 속에서 서울 평통사의 조직적 역할과 과제에 대해 생각해보는 자리로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수도권 청년모임



7월 20일(금), 수도권 청년모임을 진행했습니다. 이 날은 '7.28평화홀씨 마당의 의미와 현 정세 이야기'를 주제로 황윤미 대표가 강의를 하였습니다.

서울 남부모임 남산 둘레길 걷기



서울 남부모임에서 6월 23일(토), 남산 둘레길 걷기를 진행했습니다. 전성표 목사님이 길잡이로 곳곳에 대한 설명을 잘 해주었고, 참여한 회원들도 모두 흡족한 둘레길 걷기였습니다.

| 황윤미 |

♥ 성남용인



7/2~ 9 일주일간 미군주둔비 지불 중단 피켓팅을 야탑광장에서 실시했으며 8일 독립, 통일지사 박진목 선생 8주기 추모제를 지역 역사단체들과 공동으로 남한산성 민족정기탑에서 가졌습니다. 박진목 선생은 한국전쟁 중 종전협상을 위해 평양에 다녀온 전력으로 탄압을 받았던 평화주의자입니다. 7/27 회원모임을 갖고 황윤미 서울대표를 강사로 정세강연을 들었습니다.



성남지역 815 행사인 '까치통일아리랑' 부대행사인 김봉준 <427평화헌화물전> 공동 주관단체로 참가해 강명구 마라토너 후원을 겸한 시민평화선언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아래 걸개 그림이 김봉준화백 427평화헌화물전 성남전시 메인그림입니다. 개인별 얼굴그림에 평화메세지를 곁들여 독립된 액자에 넣어 본인이 소장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서덕석 |

♥ 인천

방위비분담금 그만주자!!



폭우가 내리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국립외교원에서 진행한 10차 방위비분담협정 4차 협상에 즈음하여 인천 청년회원들과 함께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방위비분담금 전액 삭감으로 청년복지에 쓰라는 요구의 피켓을 들고 함께했습니다.

인천에서도 가만히 있을 수 없ادم 김성태 대표님이 직접 피켓을 주문제작 하셔서 회원들과 함께 곳곳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습니다. 다시한번 실천활동에 함께한 회원들에게 감사합니다.

효순아 미선이 잊지않고 기억할게



효순이 미선이 16주기 추모제에 회원들과 함께했습니다. 회원들은 추모제에 이어 지역에 돌아와서 구월 1동 성당 신자들과 수요평화이야기 미사 시간에 효순이 미선이 사건에 대한 내용을 알리고 신자들에게 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저금통을 나눠주었습니다. 하루빨리 평화공원이 조성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내년엔 꼭 결실을 이루기를 바랍니다.

소성리에 평화와야 한반도 평화온다!!



사드철회 8차 범국민평화행동에 인천 회원들과 참여하고 왔습니다. 특히 청소년 회원들은 올해 초 소성리 평화기행을 다녀오고 나서 다시 방문한 소성리에서 다시 한번 사드가 빠질때까지 연대하고자 하는 마음을 다지고 이후에도 다시 찾아오기를 다짐했습니다.

|이우성 |

♡ 전주

7월 평화행동



2018. 7. 14(토) 오후 5시, 전주 한옥마을 경기전 앞에서 7월 평화행동을 했습니다. 이런저런 일정들 때문에 정기총회 이후 처음 갖는 거리 홍보 활동이라서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평화행동에 따르는 상쾌함은 후끈 달아오른 여름 공기를 무색케 할 만 했습니다.

좀 더 많은 회원들이 생활 속 평화행동에 참여해서 그에 따르는 기쁨과 보람도 경험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 이재호 |

회비와 후원금 (2018년 6~7월) 평화와 통일을 여는 일에 소중히 사용하겠습니다.

중앙(7월)

[대표 및 임원회비] 문규현 문홍주 이일영 박상희 이천우 임종철 강장구 권정호 배종렬 정혜열

[회원회비]김정희 연현철 황호영 안진걸 조은숙 김상열 이영민 홍영진 배현철 김성환 서경숙 이성호 이창우 김형배 이구영 유영섭 김점수 김형배 장성도 김명래 김용순 김동완 김귀옥 김광진 정경호 이옥숙 이구영 권영선 조상수 김상곤 김영남 박석중 박종권 손정빈 양동일 이현숙 조문자 조민희 황병태

[천조금 및 후원금] 신재훈 문규현 강장구 이남진 문홍주 강만길 고영대 공공서비스 노동조합총연맹 전국공공운수노조 광주평통사 순천평통사 나주평통사 광양평통사 해남모임 목포모임 무안모임 김익원프란치스코 김제모임 노동모임 대구평통사 대전충청모임 박영민 배준실 변연식 부산지역공공노조(최무태) 부천평통사 사회진보연대 서울평통사 안동평통사 오해란 이양진 이일영 익산평통사 인천평통사 임종철 장경옥 전국금속노조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조병준 평화통일연구소 향린회내남신도회 강남교회 들꽃향린교회 섬돌향린교회 전주남문교회 하늘평화공동체 향린교회

광양평통사(7월)

강동영 강삼연 김 볼 김미경 김부필 김용순 김용주 김경태 박수환 박영실 배민휴 배영일 배영일 서광식 서영란 신덕희 신유순 신광환 안성은 안정주 오종호 이금한 이영기 이인수 이장수 이정재 이종재 이희정 정병일 정인태 정일태 주경진 진덕미 천우주 최 열

광주평통사(7월)

강경식 강은미 강정원 강지연 강춘원 고영민 고익종 고재한 기원주 김경수 김광관 홍인희 홍인희 김기만 김기현 김덕용 김동우 김동호 김미영 김미진 김민선 김민선 김민식 김민호 김범중 김상철 김상철 김선미 김성룡 이영주 김수영 김숙식 김충중 김영석 김용근 김용목 김용호 김유빈 김근구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재중 김 정 김점섭 김정은 김지호 김진근 김진환 김태환 김현정 이창희 김혜련 김효경 김효용 나병철 류만숙 나윤상 노일경 노진영 류승환 명경관 문영숙 박광희 박기용 박상은 박상희 박석우 박선이 박성수 박수희 박영도 박오열 박옥수 박일남 박재영 박종렬 박종렬 박지영 박태순 박종환 배진하 백금영 백지은 백지은 박상진 서경훈 서부원 서정숙 서진영 서현미 서창우 손민석 송규란 송미자 송순교 신경구 신영호 안 민 안영숙 안재환 양 동 양민철 양승집 양정출 양해주 여정은 여정은 오봉목 오승경 오창규 오 훈 우승관 위현복 유영순 유영열 유정환 윤광란 윤상호 윤종범 윤지숙 윤현식 윤현희 이경진 이교창 이귀임 이금호 이기형 이기호 이대환 이매실 이병석 이상호 이서연 이석주 이석경 이수경 이숙호 이영희 이윤대 이윤빈 이정옥 이종욱 이지하 이태욱 이현기 이현수 임광석 임대영 임미이 임세미 임원택 정경도 장관철 장덕자 장동식 장애란 정형규 정경화 정규영 정길주 정덕윤 정동식 정복록 정성국 정성호 정수진 정유리 정철득 정진국 정찬영 정찬성 조상식 조용석 조정하 조효숙 조용근 지희준 차정은 최경미 최경환 최영문 최용호 최윤덕 최치현 최형섭 최형택 표영민 표영민 한마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순이 홍기연 홍상진 황근택 황세종 황수영 서종환 문홍주 정형달 이기문 김동열 박종주 심창남

군산평통사(7월)

고동식 권태균 권현숙 권현숙 김경수 김국태 김도걸 김봉옥 김성곤 김성수 김성훈 김오수 김윤철 김정희 김 진 김 진 김태철 김태태 김형곤 나신환 남대진 노승민 라귀민 문성주 문순임 문정숙 문지영 박귀자 박영희 박옥현 박운옥 배형원 서동완 서정호 서지원 신진숙 송상수 신동수 신수철 신수철 신유미 양은희 오금수 오주병 옥경남 위양자 유미숙 유승기 유연택 유연택 이계택 이영로 이봉호 이선희 이중민 이지윤 이진우 이현주 이희정 임정원 임춘희 임홍연 장미애 장재순 전희남 정 민 정민영 정옥진 조경수 조규준 조수현 조수현 조영환 조용주 조용주 조판철 문규곡 채영호 최소영 최은주 최은진 최희화 최재석 최진영 허가석 황 진

나주평통사(7월)

강산일 강현옥 강현옥 김경호 김병곤 김성보 김영민 김요섭 박선재 박정연 소 영 안보현 안주용 양이화 이웅범 이재청이정훈 이현영 장순영 정만식 정소영 정윤자 정희만 조기태 조정환 최진연

대구평통사(7월)

강기룡 강현옥 강형구 고경수 고희림 고희림 곡미경 구자숙 권오혁 권재호 권재호 권운진 김기연 김기옥 김기영 김덕기 김덕기 김동수 김동열 김명환 김미란 김병길 김진희 김성순 김성태 김성태 김수경 김승우 김영숙 김정수 김중희 김찬수 김현택 김현택 김효남 노영록 노익화 문광덕 문혜경 박문수 박민호 박배일 박성민 박소영 박순단 박순중 박순중 박영하 박재범 박진강 박하선 박형선 배영자 배인연 서보성 서수녀 설동현 손민철 신동찬 신효철 안재철 안주연 양은숙 오신태 오창섭 오해란 우봉진 우봉진 유소희 유은정 유은정 유창열 윤화임 이근우 이기분 이기자 이매경 이병수 이상규 이석문 이석주 이수인 이영훈 이영우 이유용 이유용 이은숙 이정연 이종균 이종진 이종준 이종준 이종식 이창우 이창우 이창주 이태광 임정금 임진우 임현정 장성태 장재호 전창훈 전호관 전희영 정명옥 정민규 정수경 정수태

정용섭 정종덕 정훈호 조규현 조유원 조현정 주경봉 최봉태 최석인 최석인 최진영 최춘식 최현정 하재철 한상욱 함수언 하정호 허해남 황병윤 황병윤

보령평통사(7월)

고미숙 권기석 권순현 권진복 김영석 김은수 김충성 김진수 성현규 서순희 서순희 송미영 송미영 신현영 안학수 오무광 오무광 우장식 유성준 이덕표 이용우 이재문 이정학 이종철 이학원 추동신

부산평통사(6~7월)

강문수 강정아 계속국 광광덕 광병철 광상진 권창훈 권철호 김강일 김건우 김광수 김광식 김규연 김기래 김나영 김남희 김서윤 김수환 김영수 김영자 김요아킴 김용만 김 옥 김유순 김유중 김영미 김영순 김영호 김은성 김은자 김재연 김점선 김점혜 김창호 김하원 김해영 김현복 김현주 김현호 김형관 김형열 김해경 김호기 김훈규 남승우 남원철 남정희 남태호 도라지 문배수 문은경 박광선 박교원 박동일 박석문 박성용 박성호 박수경 박수분 박수진 박승자 박 영 박인순 박경애 박경하 박종대 박종순 박진태 박 철 박희동 방영식 서경애 서금성 서기범 서진희 석해진 설정희 성은화 손크레이스 손기중 신상범 신승태 신차범 싸나영 심창신 안재익 안종덕 안진숙 양윤정 양진철 양하니 엄귀현 여승철 오금주 우수경 원두현 유성일 윤상영 윤해정 윤 현 이경호 이광표 이덕순 이명옥 이미현 이병로 이상남 이상철 이상정 이상진 이상영 이익용 이인숙 이정숙 이정숙 이정숙 이종영 이종욱 이진호 이창환 이태산 이화진 이학진 임상민 임상우 장호복 전기호 전나미 정계영 정대화 정영선 정봉실 정봉은 정성희 정원옥 정유휘 정익태 정익현 정재광 정해경 조경주 조병준 조보교와 진병찬 차성호 채희란 최귀화 최무덕 최병학 최영희 최용호 최은주 최충환 최 진 최희훈 하지림 한기양 한석문 허재복 황구희 황동진 황선희 황영주 황철환 <후원> 부산온배물터 김홍술

부천평통사(6~7월)

강용환 구광숙 구지춘 구현모 김경남 김덕근 김덕희 김동오 김미영 김성근 김성용 김성애 김성훈 김숙희 김영중 김용란 김용상 김인영 김정은 김정훈 김우영 김지숙 김현정 김현주 노은하 문은정 문종열 민경선 박석민 박성진 박숙경 박영미 박영민 배영미 변승기 사이화 서순복 서혜숙 석의정 성영은 손두수 손종욱 송기부 송봉훈 신장길 심영식 양남영 오옥남 유승우 유원희 윤윤현 이규원 이병훈 이숙주 이숙자 이영아 이은영 이정규 이종주 이준호 이진희 이혜련 이홍만 임숙영 임현순 장인옥 장혜영 전윤미 정근주 정선화 정승옥 정용진 정윤의 정인조 정현희 정희복 조기태 조숙희 주영숙 주영일 주옥현 주정숙 지상철 지은희 지태복 천수향 최석희 최규규 최희준 허민영 현지환 홍봉현 황영선 황영희

서울 평통사(6~7월)

강대준 강수혜 강재란 강장원 강영옥 강윤미 강호석 경영준 고경식 고광호(2개월) 고연주 공동길 관원호 구자숙 권남근(2개월) 권순걸 권순현 권영우 권정희 권재석 권현문 권혜선 김각영 김경자 김경호 김경중 김관철 김규태 김관철 김기수 (2개월) 김동훈 김두선 김명선(2개월) 김영선 김영일 김미경 김미령 김미영 김민재 김복녀 김상패 김새론 김석균 김석민 김선희 김성연(2개월) 김성훈 김승복 김수자 김안수 김영태 김영모 김영애 김영재 김영진 김영철 김운석 김원복 김유석 김유하 김은미 김은미 김은아 김인아 김일수 김재훈 김정미 김경자 김현진 김홍일 김홍희 김홍환 김지수 김 진 김진환 김태준 김한성 김한성 김현진 김현진 김화순 김후중(2개월) 김희국 김희현 나현대 나혜영 남미영 남택우 노은아 도임방주 류미아 류시자(2개월) 류은숙 류희숙 류구호 맹방학 문병모 문수정 문인근 문정화 문희경 박경혜 박덕진 박영숙 박미성 박봉희 박상호 박연미 박운룡 박종기 박종양 박종열 박종민 박진옥 박진희 박찬주 박한창 박해철 박후민 박희성 방만식 배기봉 배주희 배준실 변연식 변연희 서보혁 서영미 서예원 서유미 서은애 서정례 서정호 서진희 서정석 선소진 선소진 손부만 손수영 손영일 손우정 손윤희 손정목 송금심 송상환 신동욱 신영철 신재현 신재훈 안건모 안병순 안희옥 양계택 양금순 양덕준 양민식 양순주 양원철 여해숙 연선민 오기성 오낙영 오미정 오선환 오지연 오태경 오혜경 오혜숙 우문영 우미정 우상남 우영철 유준석 유현주 윤근식 윤동현 윤영수 윤영일 윤영진 윤재영 윤정원 윤호상 은종복 이경복 이경아 이경희 이경희 이계연 이광숙 이광중 이기묘 이문성 이동주 이두우 이병일 이경은 이상미 이상재 이상진 이선옥 이선재 이상현 이상정 이형수 이 수 이수진 이수철 이순희 이숙우 이아름 이애용 이영옥 이 윤 이재필 이정상 이정숙 이정숙 이종남 이종수 이지영 이창호 이혜경 이혜진 박승철 이화정 이호정(2개월) 임동원 임보라 임신희 임수아 임순례 임인식 임창희 임진영 임태환 임호일 장남희 장성식 장정우 장진영 장진영 전성표 전현우 정광진 정김경숙 정상현 정소연 정수미 정영호(2개월) 정원진 정준영 정호천 조계성 조영희 조창현 조현우 지미자 진유식 진태준 채근식 채운석 최대목 최문숙 최정원 최영환 최영환 최향숙 한문희 한상근 한상기 한상숙 한영록 한준현 한현실 한호석 허가자 허한중(2개월) 한동식 형복순 홍기정 홍영의 홍영준(2개월) 홍창의 (김명화) 홍희덕 황덕호 황 원 황윤미 황의대(2개월) 황철우 *후원금 거치시키고

순천평통사(7월)

고성식 고성식 공훈표 김경수 김귀진 김동구 김동수 김병태 김영곤 김용재 김용태 김유옥 김이준 김인철 김경호 김준희 김현주 김혜숙 김효소 김희숙 류보은 문영태 문영문 문재경 박미옥 박민근 박병설 박성숙 박영주 박정훈 박종삼 박종철 박종태 박종택 박진형 박필수 박정식 백선미 손소상 송담수 박대기 신근홍 신원식 신현후 이병일 양승규 엄상영 오목옥 오태현 오하근 유병우 유옥상 윤성근 이겨라 이귀엽 이규학 이기호 이민재 이성대 이애란 이옥자 이형민 장복식 정상호 정양호 정영동 정재준 조영식 조정호 조종철 조희열 최미나 최희진 한해영 허규희 허남필 홍인식 경경호

안동평통사(7월)

강병철 강병철 고정희 권영희 권주원 김대성 김대현 김동원 김두년 김예숙 김옥희 김재권 김종렬 김재현 김희배 류한걸 민현주 박재근 손현목 신성일 심은혜 여상화 오덕훈 이상로 이우원 이혜선 정세길 전경상 조규진 조석록 조선이 조영준 차명숙 차명숙 최윤희 강석주 김동수 김정석 김경희 김주철 김지식 김판갑 김현태 박무식 박용재 박종규 배용환 이 창 윤 창 한철희

익산평통사(7월)

강익현 고은수 김대승 김양영 김유순 김유순 김은진 김중화 김창수 김현숙 김희진 노영래 박두식 박영현 박종호 박은경 박지영 박창신 배병욱 백낙진 백선영 서 용 송동환 신귀백 신항우 심경희 안영목 안 준 안현석 오기주 유미정 유재동 유진우 유희택 이근수 이문선 이병식 이복순 이석근 이홍신 이은경 이장우 이정철 이종민 이종구 이종구 이진규 이해경 이화춘 임덕근 정종수 전미선 전미영 전호정 정운송 정운용 조경권 채미진 채운식 최미애 최민욱 최영미 최원경 최재철 최형남 하춘자 한상숙 허명석 허정철 황영애 황익성 황인철

인천평통사(7월)

강영구 강원희 강인석 강인철 고상혁 고영남 공계진 박준경 권오숙 권창식 김갑봉 김강연 김경민 김금옥 김도윤 김동근 김두원 김만우 김영종 김문경 김미경 김민정 김병미 김병철 김보희 김병경 김봉은 김상기 김선경 김삼미 최현호 김상기 김성태 김소희 김숙희 김시완 김영순 김오성 김우경 김윤석 김윤조 김은숙 김은옥 이시우 김익균 김일중 김일희 김경녀 김정자 김경하 김종갑 김중호 김주숙 김중찬 김중현 김중현 김지수 정시호 김지훈 김태영 김현석 김현주 김현진 김형진 김혜정 김희숙 남익현 류미애 문병호 문선희 박경림 박광선 박남수 박달수 박명록 박미정 박순길 박순이 박승주 박영민 박용희 박원재 박유순 박인호 박직숙 박정윤 박 진 박현주 박승우 백은정 서경혜 서달원 서덕용 서영선 서재훈 소병록 손선재 손현철 송경평 송재철 송정로 송한석 김민서 신윤례 신희철 심신아 심옥민 심자선 안용원 양승조 여영석 오미경 오미경 오종준 오창근 오혁남 오혜영 원 웅 원종민 유근석 유성국 유은영 유정섭 유정희 유원경 유현섭 윤송하 윤영섭 윤인준 윤화섭 최창수 이기는 이덕래 이동현 이만재 이무성 이무용 이미경 이미정 이병철 권오숙 이상천 이상로 이상은 이상희 이세구 이숙희 이숙현 이숙희 이만기 이국희 이윤수 이윤우 이우성 이은희 이영하 이재술 이재우 이정옥 이정옥 이재학 이종민 이준걸 이창근 이현직 이춘식 이하선 이해민 이해현 이해숙 이현숙 이현숙 이해경 이해정 이화정 인수범 임경희 임동렬 임재훈 임희호 장광수 장귀숙 장동훈 장세윤 전학구 정명락 정미자 정서진 배경진 정승로 오수경 정유성 정찬식 정현숙 정형서 정희진 조경숙 조남순 조병구 조성래 조성혜 조영수 조인희 조재호 지현국 지현진 지형철 지재환 최리주 최복례 최서일 최순규 최 왕 최 웅 최정옥 최정민 최종락 최준배 최현숙 추승운 추영호 하경자 하태준 한만승 한상숙 한성원 한신복 한은숙 황선아 한영순 한정수 한현진 한현희 허문애 홍중 홍학기 황병태 황인철 황현숙

전주평통사(7월)

강대권 강대권 고이석 고차원 권동순 국 산 국윤호 권동용 길성환 김광재 김미현 김미현 김민준 김병선 김병선 김여진 김경호 김은자 김재병 김정임 김주진 김진성 김홍만 김효숙 김희찬 나영숙 노재화 문이경 민영희 박기순 박상만 박수배 방용승 배은기 백혜영 봉형근 서경희 서광호 서광호 서 승 서은숙 송기춘 송미영 송주섭 송호영 신귀철 신선화 심병호 심 훈 양정자 엄경희 오봉숙 원명재 유영진 이기봉 이기환 이동배 이동주 이송철 이수원 이승화 이준희 이준희 이형구 임애림 임용진 임익인 장종철 전상호 전영석 정기동 정기철 정찬대 정형용 조경희 조미숙 조정현 채주병 최금희 최명숙 최희용 최용기 최원규 최재훈 최정옥 하재호 한근수 한상기 허만승 황재현 한국기독교교장회

성남용인(준) 평통사

김종국 김준기 김춘식 김보무 노병돈 박종환 서덕석 심재상 원형석 이순선 이웅위 정미라 전선희 정자혜 지경필 최병철 하성주 허남해

강원 지역 회원

김영남 남주목 민원식 박수영 이진석

김제 지역 회원

강동욱 권태정 김성순 김승환 김영미 김익현 김진원 김진호 김창수 김형기 김형에 나현곤 남궁윤 노경두 노규석 문병선 박기주 박병배 배영술 백창민 백창민 소광석 손은하 안진성 오인근 유성룡 유재홍 이경원 이윤만 이은경 이현숙 이희곤 장덕상 전미영 전원문 정현문 정형국 정호영 최홍일 하기호 하성애 황해정

대전충청 지역 회원(6월)

가명현 강기현 강대훈 강선호 강홍순 고광성 권현영 김경숙 김용수 김규원 김기수 김기현 김도석 김동희 김미경 김미숙 김미연 김상중 김삼미 김성기 김성기 김성자 김영숙 김영순 김오경 김정수 김지수 김진양 김진욱 김종업 김홍수 나백주 남누리 노창래 류기형 모성진 모성진 문성호 문영안 민성호 박병문 박병문 박성화 박원숙 박은호 박인천 박종찬 박필규 박희인 백승혁 박영기 백용기 변해숙 서남철 서순희 서영희 서인식 서인식 석수진 손정희 송광성 송신근 송원준 송광은 신성원 신주희 신현용 신현정 심규상 심상무 심우근 심전호 심주호 안창호 여근식 오광영 오수진 오수철 오승아 오완근 오찬설 원용호 유성호 유영민 유영재 유요열 유정환 유정원 유종철 유진범 윤병민 윤상렬 윤혜경 윤호균 이건용 이광현 이기훈 이도구 이병영 이병구 이세중 이수연 이요한 이우근 이은영 이은정 이재욱 이종영 이주호 이 진 이 진 이진구 이창복 이철수 이철호 이춘자 임병민 임춘근 정도정 정명진 장인백 전양배 전은경 정명진 정성현 정승길 정 현 정창석 정태순 정희대 조동준 조만영 조병현 조봉현 조부활 조성미 조영주 조재현 조재형 조주형 최영민 최혜창 추교하 한상열 함필주 홍지은 황영식

마창진 지역 회원(7월)

김봉현 김윤자 문상환 박승일 신경희 신금숙 신금숙 여영국 윤소영 윤준근 이상익 이원영 이원영 이우성 조광호 차정민

목포 지역 회원(7월)

강성휘 강성휘 강 신 강영태 강일규 고정석 권해경 김경희 김관일 김금식 김기대 김나리 김나리 김무영 김민지 김상덕 김석원 김수정 김영재 김용철 김중수 김중석 김지희 김진수 김창현 김현아 김현우 김현우 김현진 류경수 마상진 문성훈 문애준 문희철 박권철 박권철 박미숙 박미숙 박상준 정지범 박 웅 박충성 백동규 변철진 서만철 서창호 소복례 송낙순 손민원 손지은 송원찬 송철호 김재홍 신현준 안광미 안광미 양현주 오승주 오승주 유민식 유 종 유지운 유훈영 이경수 이구인 이보라미 이종환 이지용 이미정 임동용 임소만 임소만 장문규 장세원 장유진 전일순 정석기 정성빈 정성우 정성찬 정영록 윤영성 정찬길 조기현 조상현 조상현 조영규 조영민 조영민 최기춘 최미애 최진호 최 훈

무안 지역 회원(7월)

강성록 김경태 김기주 김덕현 김덕현 김병기 김선발 김양수 김영호 김옥길 김창필 김호산 모영현 문영란 문유신 박상식 박치우 박치우 송병식 오해근 유동주 이도선 이정훈 이태석 임채정 정상철 정영완 정중석 정진록 채미라 최홍률 홍수석 홍용식

전남 지역 회원(7월)

강덕구 강덕구 강복현 곽길성 곽길성 기숙희 김광식 김대현 김 문 김미숙 김선태 김슬기 김을남 김현지 김형식 김형식 김희태 나옥석 노병남 노병태 문미경 문미경 박경옥 박광운 박동화 박용두 박종영 박종재 박창균 박태현 방진석 배성환 서인호 서정대 송호철 송호철 오태형 유원섭 유현숙 윤구현 김광수 윤미라 윤미라 이광수 이광철 이균열 이동현 이숙현 이종희 이종희 이형진 장경자 장원섭 장영미 정은정 조동근 채일춘 최석 최영주 한명철 한창덕 홍요한

제주 지역 회원(7월)

강호진 고관일 권형우 김경훈 김동원 김성규 김중환 문무병 방은미 양요호 오영애 오상진 오주연 이정훈 이정훈 정영주

평택경기 지역 회원(7월)

강경남 권차량 김교원 김상용 김성환 김영호 김용표 김우성 김택균 도영호 민선임 박성철 서맹섭 손영민 손영민 신원호 연창호 영형만 오영미 윤선호 이가영 이경수 이민재 이수용 이수정 이양진 이은우 민희희 이해준 정인교 조영섭 조재철 차지아 룬와라관 최신헌 최신헌 추병태 한동수 한민규 한상균 한상진 황영선

해남 지역 회원(7월)

강정자 강태양 김병욱 김수경 김양수 김영자 김은근 김은숙 김정삼 나성곤 노 란 문재식 문형귀 민경진 박병을 박영자 박은주 박종삼 배종진 백중수 백경진 봉문수 봉문수 서용석 신하균 안소희 안영자 양동주 양하숙 염재원 오상재 오영택 오형욱 윤예준 윤준서 이무진 이병재 이상귀 이원열 이윤명 이정희 이지영 임현선 장미호 장우광 전상규 정거석 정진아 조창익 주단우 최영수 최은숙 한강희 박승규

평화통일연구소(7월)

[이사회의] 강정규 강정규 김경호 김영환 노재열 박진석 박진석 송기춘 신정길 이 계연 최무영 [후원회비] 강문수 고희림 고희림 김동근 김일희 김지영 김현숙 남궁갑 남궁갑 서경혜 윤지훈 조원용 허명석 강수혜 강윤미 권기서 권순걸 권진복 김경원 김금옥 김대성 김대승 김미령 김성태 김숙희 김시완 김시완 김영석 김영재 김영재 김명희 김유옥 김중희 김판태 김현미 김효남 류승하 문규현 민경숙 박병을 박복희 박상준 박석보 박석보 박성진 박영희 박은숙 서종환 손종욱 신재현 신재현 심신아 심자섭 오미정 오혜란 유영재 유정섭 유원경 윤송하 윤화섭 이기훈 이태희 이명옥 이미경 이미정 이석문 이선열 이양재 이우성 이은영 이은아 이재호 이정숙 이주은 임주희 임현미 장남희 정근수 정규영 정동석 정수경 정종진 정형관 조미향 조미향 조승현 주정숙 지연실 지연실 지희준 최병삼 최윤정 하태준 한승동 한해영 황수은 황윤미

중앙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농협 539-01-145822 문규현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연 락 처 : 02) 712-8443 spark946@hanmail.net

서울평통사

주 소 :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충정로3가)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243-21-0339-741 서영석
연 락 처 : 02) 713-1992 seoul-spark@hanmail.net

부천평통사

주 소 : 14572 경기 부천시 원미구 부천로90번길 46 2층
계좌번호 : 국민은행 314802-04-004244 주정숙
연 락 처 : 032) 671-7179 bcspark0601@hanmail.net

인천평통사

주 소 : 22156 인천시 남구 주안동 608-5번지 201호
계좌번호 : 우리은행 1002-588-004005 김일희
연 락 처 : 032) 428-2230 icspark523@hanmail.net

보령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 351-0995-3651-23 김영석(보령평통사)
연 락 처 : 010-2292-7883 김영석

익산평통사

주 소 : 54542 전북 익산시 고봉로36길 9-2
계좌번호 : 농협 514-12-028901 김대송
연 락 처 : 063) 832-0018 king208208208@hanmail.net

군산평통사

주 소 : 54077 전북 군산시 백릉안4길 6
계좌번호 : 국민은행 004-21-0892-744 김판태
연 락 처 : 010-8860-2230 김판태

전주평통사

주 소 : 54954 전북 전주시 완수구 전릉로 38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506-01-323911 이승희
연 락 처 : 010-2237-7822 이재호

광주평통사

주 소 : 61245 광주광역시 북구 중가로43길 광주YWCA 605호
계좌번호 : 광주은행 169-107-165626 정동석
연 락 처 : 010-5610-5230 정동석 kj-spark@hanmail.net

순천평통사

연 락 처 : 010-4623-6906 김용재

광양평통사

연 락 처 : 010-3022-0452 서광석

나주평통사

연 락 처 : 010-3602-1849 이정훈

안동평통사

계좌번호 : 농협중앙회 733-02-360613 김헌택

대구평통사

주 소 : 41919 대구광역시 중구 서성로 14길 59
계좌번호 : 대구은행 076-13-161229 대구평통사
연 락 처 : 053) 428-0727 dgspark@hanmail.net

부산평통사

계좌번호 : 부산은행 062-12-007493-0 김건우
연 락 처 : 070-7809-4311 bsspark@hanmail.net

성남용인평통사(준)

계좌번호 : 농협 351-0959-1481-63 서덕석
연 락 처 : 010-2462-1377 서덕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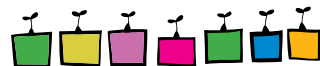
대전 010-3297-0568 유영재

해남 010-5612-8125 박승규

무안 010-3645-2722 문영란

김제 010-9957-7478 손은하

목포 010-5610-5230 정동석



상임대표 문규현 **공동대표** 고영대 김병균 문홍주 박상희 변연식 이일영 이천우 임종철

감 사 박유순 안병순 **지도위원** 강정구 김순정 김영훈 명진 박순희 배종열 조주형 정혜열

자문변호사 권정호 김소리 김형태 남성욱 박주민 이남진 이덕우 장경옥

발행일 2018년 8월 14일 **발행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발행인** 문규현

주 소 03751 서울시 서대문구 경기대로5길 27 (충정로3가) 2층 **전 화** (02)711-7292, (02)712-8443 **팩 스** (02)712-8445

홈페이지 www.peaceone.org **전자우편** spark946@hanmail.net **후원계좌** 기업 057-084533-01-013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등록번호 서울라 10482 **간 별** 월간 **등록일자** 2003년 10월 9일